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의안 번호	1894
----------	------

제출연월일 : 2019. 8. .

발 의 자 : 이영아 의원

1. 제정 이유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의 주체로서 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기본방향 및 시장의 책무 (안 제3조~제4조)

다.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및 위탁 등 (안 제5조~제6조)

라. 공공시설의 이용 및 교육전문인력 양성 (안 제7조~제8조)

마. 포상 및 시행규칙 (안 제9조~제10조)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6. 예산 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19년 8월 5일 ~ 8월 15일(1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붙임 (전국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9. 관련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평화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하남시민이 평화통일의 준비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평화·민주적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사회통합 기여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환경 구축
5.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 배제를 통한 공감대 형성

제4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이하 “평화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보급,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청년·장년·노인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5. 평화통일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통일교육 실시 및 시민사회에 통일교육프로그램 공유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공직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일교육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13.>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9.>

-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9.>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기타 참고자료

전국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자 치 단체명	조 례 명	제개정일자	관련부서
경기도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01-14	평화기반조성과
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9-20	총무과
경기 안양시	안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8-11-16	자치행정과
경기 평택시	평택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6-02-19	자치협력과
부산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8-12-31	총무과
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	2015-03-30	자치행정과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5-10-29	인권교육과
대구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7-10-30	총무과
대전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7-12-22	교육공동체과
대전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7-12-29	총무과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7-12-18	자치행정과
대전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조례	2017-12-22	
대전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8-10-15	
울산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13	
경상북도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8-12-27	미래전략기획단
전라남도	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7-11-02	자치분권과
전남 나주시	나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6-01-11	총무과
전라북도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16-09-30	자치행정과
전북 전주시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7-03-30	자치행정과
충북 증평군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018-12-28	행정과